

시선

사설

총장선출제 논의 본격화  
과정부터 민주적이어야

조인원 현 총장의 임기 막바지를 앞두고 새로운 총장선출제에 대해 학내 각 구성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학내 주요 회의체에서 총장 선출이 중요 안건으로 다뤄지고 관련 간담회와 토론회가 잇따른다.

지금까지 우리학교는 법인이사회가 총장을 임명해 왔다. 그렇게 결정된 총장의 인선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도 이 학교에 가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교훈으로 내건 우리학교를, 자율운영제를 통해 학원의 민주화를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우리대학을 총괄하고 대표하는 총장만은 그간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돼왔다.

1987년 민주항쟁은 대한민국에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화의 상징을 가져오는 동시에 대학에도 총장 직선제라는 상징을 가져왔다. 정권이 대학을 통제하기 위해 틀어쥐고 있던 총장 임명권은 대학에 돌아갔다. 다만 상징은 어디까지나 상징이었다. 이는 교수에 의한 직선제였지, 학생이나 직원 등 여타 교내 구성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공무원법은 총장 선출방식부터 교수 집단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나마도 지난 정권들이 9년 동안 교수에 의한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각종 대학 지원 사업의 조건으로 내걸었고, 많은 국공립대가 직선제를 폐지했다. 이 과정에 부산대도 고현철 교수는 민주주의와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투신하기도 했다.

정권이 바뀐 이후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다시금 총장직선제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겨울 제주대는 교수, 학생, 직원이 총장 선거 투표에 참여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이었던 이화여대는 내홍 끝에 개교 131년 만에 동문까지 참여하는 직선제를 일궈냈다.

현재 우리대학과 같이 총장 선출에 구성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봉쇄된 대학은 몇 남아있지 않다. 2008년까지 교수들이 총장을 선출해왔으나 두산 인수 이후 법인이 총장 선출권을 뺏긴 중앙대가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법인이 총장선출제 개선 논의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의 뜻을 밝혔다. 총장 선출의 전권을 행사하던 법인이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은 분명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는다. 법인이 총장선출제 논의를 위해 설치할 상설기구에 구성원은 참여할 수 없다. 법인이 어떠한 결과물을 발표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알기도 어렵다. 반신반의하며 법인의 입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사립대학이라는 특수성을 심본 감안한다고 해도 결국 여전히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태의 우리학교가 민주화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당장 모든 구성원의 직접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말이 아니다. 대학과 대학의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는 총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 하는 법인의 논의에서조차 구성원이 배제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다.

이제 첫 발을 댄 논의다. 결국 쥐고 있는 것은 법인이다. 민주화의 기치 아래 70여 년을 이어 온 경희대학교의 다음 총장은, 그 선출 제도부터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울 것이다.

대학은 지금

학내 인권침해 논란 계속돼

안나연 기자 na@khu.ac.kr

한국외대 수학과 학생들이 ‘노예팅’이라는 게임을 엠티(MT)에서 진행한 사실이 지난 9일 페이스북 ‘한국외대 대나무숲’ 페이지를 통해 드러났다. (지식의 상아탑에서... 한국외대 ‘노예팅’ 논란/조선일보, 2018.04.11) ‘노예팅’이란 선배가 후배를 ‘노예’로 설정하여 경매 방식을 이용해 사고파는 게임이다. 해당 게임을 통해 선배는 후배에게 음주 강요와 더불어 ‘19금 게임’ 등의 인권침해를 진행해온 것이 밝혀졌다. 한편 한국외대 수학과는 그간 노예팅 금액의 반을 학과 회비로 사용해왔다.

고려대에서는 학생식당 공사가 불통 속에서 이루어졌다. (통보만 해놓고... 학교본부 ‘묵묵부답’/고대신문, 2018.04.09) 학교 측은 과학도서관 1층 열람실을 지



이 주의 주제 - 융합전공

무엇이 먼저인가



장유미 기자  
yummy0825@khu.ac.kr

지금으로부터 세달 전 ‘융합전공’이 신설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설치 전공, 시행의도, 전공신청 시기 등을 포함한 간단한 보도기사를 쓴 적 있다. 그때만 해도 융합전공은 ‘아 그렇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이야기였다. 융합교육을 위한 학교의 다양한 시도 중 하나일거라 생각했다. 아무리 되뇌어도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는 신규 전공 이름을 보고 의문을 품지 않았던 이유는 그간의 ‘다양한 시도’들 중 성공한 것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탓이다.

새로운 형식의 전공을 설치하기 위해선 학칙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학칙개정을 위해선 감사행정원,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융합전공 설치는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올해 두 차례에 걸친 대학평의원회에서 융합전공 관련 학칙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기존 시행됐던 ‘연계전공’과 ‘융합전공’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로 긴 논의가 이어졌다. 그 밑에 있는 본질적인 불만은 ‘소통의 부재’였다. 학교 구성원에게 융합전공을 알리고 공론화해 연계전공과 같은 그간의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석하는 과정이 앞서야 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물론 융합전공 설치신청을 위해선 융합전공에 참가하는 학과 교수의 일정한 동의가 필요하다. 한 융합전공 지도교수는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나름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전공을 조합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융합교육의 주체인 학생은 그 모든 논의에서 빠져있었다.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김효형 회장조차 대학평의원회에 참석해 학칙개정안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융합전공의 내용을 처음 접했다고 했다.

2016년 12월, 교육부가 학사제도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우리학교가 6개 융합전공 설치를 확정하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렸다. 기존 전공을 바탕으로 한다고는 하나 새로운 전공 6개를 똑딱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새로운 전공을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급했다.” 여러 취재원을 만나며 많이 들었던 말이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교육의 주체조차 논의과정에 포함시키지 못했을까. 융합전공을 처음 적용받는 2018학번을 대상으로 수요를 묻는 간단한 설문조사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급했다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학칙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까지 급했다.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사지원과는 융합전공에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남아있는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 “아직은 시행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답했다. 구성원 간 논의 없이 학칙개정부터 추진하고 준비과정을 거치는 것과, 구성원이 충분한 논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원만한 학칙개정을 이끌어내는 것 중 무엇이 합리적인지는 명확해 보인다.

하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공간에 학생식당을 신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착공 시기가 시험기간과 겹쳐 면학분위기 조성에 지장을 주고 열람실 자리 부족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1층 열람실이 지하로 이동됨에 따라 장애학생은 열람실 이동을 위해 반드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야 한다. 이에 해당 공사가 장애학생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성희롱으로 논란이 된 연세대 문과대학 A교수의 징계를 요구하는 행정 시위가 지난 6일 학내에서 진행됐다. (“A교수를 규탄한다” 백양로를 채운 목소리/연세춘추, 2018.04.11) 시위가 진행 된 뒤 지난 10일에는 학생대표자들이 대학본부를 대상으로 요구사항을 제출했다. 해당 요구사항은 ▲A교수의 징계 논의 과정 공개, ▲피해자회복 및 구제 등을 포함했다.

지난 6일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는 투표를 통해 총장예비후보자를 5명으로 좁혔다. (총장예비후보자 5명으로 좁혀져/대학신문, 2018.04.08) 예비후보자 선정 과정은 교직원과 외부인사로 이루어진 총추위원을 통해 선출됐다. 선출된 후보 다섯명은 오는 18일 연

건캠퍼스에서, 20일 관악캠퍼스에서 소견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달 28일 이화여대에서 개최된 총회를 통해 성폭력으로 논란이 있었던 교수들에 대한 파면 요구가 포함된 안건이 가결됐다. (‘K·S 교수 파면’ 추가된 수정 요구안 가결/이대학보, 2018.04.02) 지난 달 19일과 22일 조형예술대학 조소과 K교수와 음악대학 관현악과 S교수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이전인 11일에 2018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가결된 성폭력 문제 요구안이 해당 교수진의 파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를 통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예방뿐만 아니라 처벌 역시 가능하게 됐다.

중앙대 총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이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됐다. (서울캠 전학대회, 소수자 위한 선거 세칙 개정했다/중대신문, 2018.04.09) 사회과학대 정수형 부학생회장이 추가안건을 통해 선거운동과 투표 진행과정에 있어 외국인 유학생이나 장애학생 등 차별받는 소수자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모든 학우를 대상으로 한 차별 없는 선거 진행’이 추가안건으로 상정되며 가결됐다.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겠다

세시봉

설지연 (국제뉴스팀장)



달력은 4월 중반도 넘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라남도에는 봄을 시샘하는 눈이 왔다. 풀리지 않는 날씨에도 벚꽃은 언제나 그렇듯 활짝 피어서 봄이 왔음을 알린다. 하나 둘 비처럼 떨어지는 벚꽃 잎과,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벚꽃 엔딩’과 같은 ‘봄의 캐럴’은 추운 겨울을 깨고 다시금 찾아온 봄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설렘과 우울함이 복잡하게 교차함을 느낀다. 세월호 참사 후 단원과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한 영상을 본 적 있다. 영상 속 아이들은 뱃나무 아래에서 벚꽃 엔딩을 따라 부르며 서로 장난치고 있었다. 이 영상을 본 이후 벚꽃 엔딩을 들을 때마다 그 장면이 가슴을 메이게 한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이다. 사고 소식을 접하던 그 순간의 먹먹함이 아직 선명한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세월호 4주기를 앞두고 팽목항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고, 광화문에서는 대규모 추모 행사가 열렸다. 우리 학내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분향소가 설치됐고 세월호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극장에 걸렸으며, 관련 특집 방송도 잇따를 예정이다. 우리는 여전히 노란 리본을 달고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약속을 지키는 중이다.

잊지 않으려면 남은 사람의 몫을 해야

“잊지 않겠다”는 것은 그저 기억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남은 사람의 몫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는 아직까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로 우리 사회 한 칸에 남아있다. 4년이 지났지만 5명은 아직 바다에 있다. 제주도도 수학여행을 떠나던 고등학생들이, 새로운 터전에서의 삶을 꿈꾸던 한 가족이, 초등학교 동창과 여행을 떠난 중년의 친구들이 어떤 이유로 비극을 맞아야 했는지 4년이 지나도록 무엇 하나 밝혀진 것이 없다.

남은 숙제를 풀어내는 것이 남은 우리의 몫이다. 다시는 이런 참담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은 무엇인지, 인명구조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남은 사람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잊지 않겠다는 실천하는 것이다.

재발 방지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모든 이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진상규명은 필요하다. 생존자와 유가족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그 날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남은 사람으로서 몫을 다 해야 한다. 무엇이 소중한 사람의 부재를 만들었는지 알지 못한다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피해자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다.

지난해 3월 세월호 선체가 인양돼 육지로 다시 돌아왔다. 지금은 선체 직접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5월 31일 내로 마무리 된다고 한다. 선체 직접 작업이 마무리 되면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수색과 사고 진상규명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부디 세월호 참사 원인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5명이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되풀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9년 5월 12일 창간(주)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조영옥 | 편집장 박지영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33-4 | 주소정경 02-441-7317(미래21) |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희곡동) / Tel 02-961-003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21